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년 연장

8월 27일 만료 앞두고 연장 결정… 2027년 8월 27일까지 지원 계속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오는 8월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으나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해 이번 지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돼 기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은 1년 연장됐다.

시는 지난해 8월 2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각종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2027년 8월 27일까지 총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이어갈 수 있어 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고용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연장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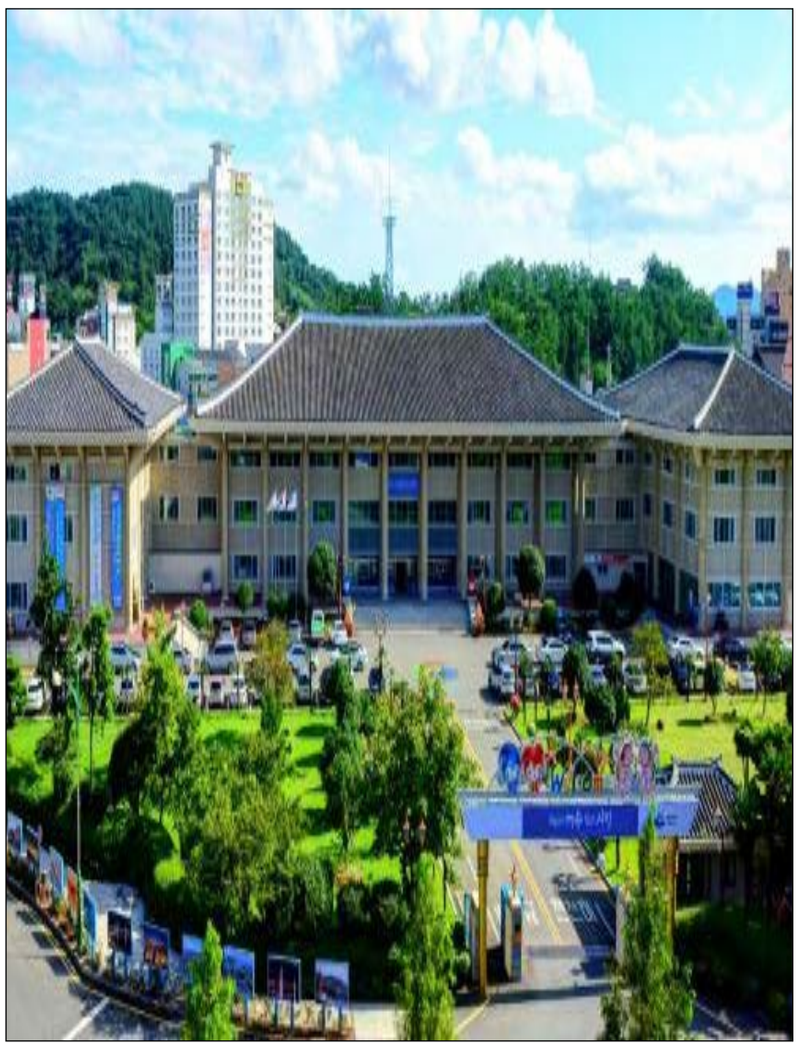
특히 기업의 고용유지와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지원해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 산업과 고용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구직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기업의 고용 유지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청 전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의 행복 지킨다

순천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억 원을 투입해 수질검사 강화, 취약시설 선제조치, 시민 견학 등을 진행한다. 취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가정 수질검사도 지원한다.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생 시 개선조치까지 지속 관리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돗물 생산과정을 알리고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천시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생산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시민이 진짜 주인" 권위 버리고 '의전 간소화' 대전환

광양시는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시민 중심 행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고 시민 중심 의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광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시 주관 행사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행사와 시민단체 행사에도 적용되며, ▲시민 중심 소통 ▲의전 간소화 ▲의전 기준 명확화 등 3대 방향을 담고 있다.

시 주관 행사에서는 시장을 국회의원과 시의장 등 주요 내빈 소개가 끝난 뒤 마지막에 소개하고, 지정석을 최소화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을 우선 배치한다. 또한 내빈 도착을 기다리며 행사가 늦어지는 관행을 개선해 정시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축사는 행사와 직접 관련된 인사를 중심으로 3명 이내, 1인당 3분 이내로 운영하며, 내빈이 10명 이상일 경우 영상이나 자막으로 소개해 시간을 줄인다. 내빈 도열과 과도한 수행 안내도 지양하고 담당 부서 중심의 최소 인원만 배치한다.

광양시는 '민선 9기 의전 실무안내서'를 전 부서에 배포해 일관된 의전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시민 중심의 의전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전 개선을 지속해 권위주의적 관행을 줄이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 촘촘한 복지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곡성군은 지난 20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40여 명과 주민 대표 등 참석한 가운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애 전 과정을 넓게 보듬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4년) 계획이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민간기관 관계자, 세부 사업 담당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TF팀 인터뷰 등을 통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적 대표 과업과 세부 사업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계획수립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 욕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곡성군은 중간 보고회에 제시된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주민 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군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최종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군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위촉… 첫 지급 준비 마무리

구례군은 지난 18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8개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위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8개 읍·면에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위촉 위원 39명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열린 교육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상황,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지급 대상자 심의 결정 기준 등을 다뤘다. 특히 8개 읍·면이 동일한 잣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인정 기준과 유형별 판단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군은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초부터 마을별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며, 오는 8월 20일 읍·면위원회 심의까지 3단계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정당하게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며 "위원님들의 공정하고 세심한 심의가 사업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7월 한 달간 21,394명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오는 28일 7월분과 8월분을 합쳐 1인당 40만 원을 첫 지급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